



“심석희 사건, 모든 제도 전면 재검토”

체육계 성폭행 비위근절... “그간 대책들 사실상 효과 無

성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다. 영구 제명이다. 또 성폭행 등 체육분야 비위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와 관련,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노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온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성폭행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체육계 성폭행 관련 징계자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제도 구축한다.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에 포함되는 등 영구제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스트레이크 아웃제’ 성폭행 범위도 확대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행 보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한다.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지구조를 탈피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정부는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비위 조사를 추진한다.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치도 추진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 훈련 여건과 예방책도 마련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인권 보호 환경도 갖춘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사가 상주,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촌 합숙훈련 상황도 점검한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날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스

지역광고비대행소: 정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심석희, 그런 고통 겪었다니” 코치 성폭행에 여론 분노 폭발

여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조 전 코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9일 심 선수 측 변호인에 따르면 심 선수는 지난날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신이 2014년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당시 심 선수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지난해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선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늘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어두웠던 표정의 심 선수에게 이유가 있었다”며 “체육계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본적으로 일별백계해야 한다”고 울었다.

“@poie****”는 “심석희 선수가 말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일들을 겪고 그것을 밝히기까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력 처벌 청원에 힘을 실었다는 직장인 윤모(32)씨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가 의지할 사람은 교육하는 코치 밖에 없었을

“코치 강력 처벌” 청와대 청원 15만명 돌파

“의지할 사람이 코치인데... 믿고 싶지 않아”

전문가 “인격적으로 덜 된 지도자도 있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 온 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서, 여성 피해자로서 당할 추가적인 피해와 후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 두려워 모든 일을 혼자 감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날인 8일 보도되자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15만명을 돌파했다.

여성 국가대표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성폭력까지 견뎌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전 코치를 비롯해 스포츠 업계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ju****’는

텐데 이런 식으로 학대가 이뤄져 왔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체육계의 코치와 감독들에게 제대로 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정근 호서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이전처럼 감독과 코치의 폭행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며 심석희 선수가 용기있게 밝힌 것으로 본다. 지도자 연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게, 선수들이 코치가 되면서 좋은 지도자도 많지만 인격적으로 덜 된 지도자들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지도자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과거에 체육학 연구원에서 윤리교육과 성추행 방지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코치와 감독도 많아지면 이같은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